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경제의 미래, 중견기업 육성에 있다

11월 9일 (금) 10:00 ▶ 12:00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홍의락 주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문의 | 홍의락 의원실 (788-2971)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경제의 미래, 중견기업 육성에 있다

< 프로그램 >

개 회 식

사 회 : 유영식 이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10:00~10:05 국민예배 및 내빈소개
 10:05~10:10 축 사 : 지식경제부 윤상직 제1차관
 10:10~10:15 인사말 : 민주통합당 홍의락 국회의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윤봉수 회장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사 회 : 표정호 회장 (한국중견기업학회)

<주제발표 섹션1> 중견기업의 육성과 금융정책과제

- 10:15~10:55 (40분)
- 발표자 : 동학림 수석연구위원 (IBK경제연구소)
 - 토론자 : 권영준 교수 (경희대 경영학부)
 - 문승욱 국장 (지식경제부 중견기업국)
 - 이병기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 전현철 상근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10:55~11:05 (10분) 질의 및 응답

<주제발표 섹션2>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중견기업의 역할

- 11:05~11:45 (40분)
- 발표자 : 박정구 교수 (숙명여대 법학부)
 - 토론자 : 김석호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 김홍빈 국장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 홍기영 부장 (매일경제신문)
 - 황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민)

- 11:45~11:55 (10분) 질의 및 응답

- 11:55~12:00 폐회

목 차

섹션1. 중견기업의 육성과 금융정책과제	1
지정토론	19
섹션2.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중견기업의 역할	33
지정토론	55

제1부

중견기업의 육성과 금융정책과제

동학림 수석연구위원 IBK경제연구소



[중견기업연합회 국회세미나 주제발표]

중견기업 육성과 금융정책과제

2012. 11. 9

동학림
(IBK경제연구소)

Contents

- I.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현황
- II. 중견기업의 자금조달과 금융애로
- III.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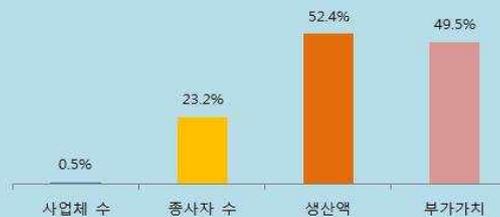
I.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현황

과도한 대기업 집중, 중견기업이 답이다!!!

- ✓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입국 정책
- ✓ '90년대 정치,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경제 불균형 심화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중>

	전체	대기업	비중
사업체 수 (개)	111,722	596	0.5%
종사자 수 (명)	2,798,297	647,846	23.2%
생산액 (억원)	11,678,402	6,119,855	52.4%
부가가치 (억원)	3,926,600	1,944,638	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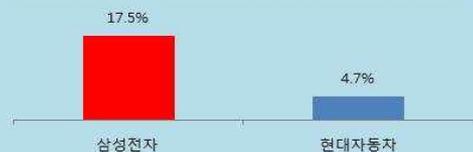
주 : 2009년 5인 이상 제조업 기준, 자료 : 통계청(2010)

<한국 4대 재벌의 경제력> (단위:조원)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삼성	433.7	273.0	20.2
현대자동차	190.7	156.3	11.8
SK	139.2	155.3	6.4
LG	100.8	111.8	2.1

주 : '12년 4월 기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 대표기업의 시가총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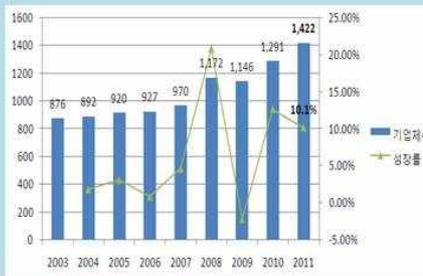


주 : '12년 10월 2일 기준, 자료 : KRX 한국거래소

중견기업의 경제적 비중 증가

- ✓ 사업체 수 : 1,422개('10년 대비 10.1% 증가, 전체 사업체 수의 0.04%)
- ✓ 종사자 수 : 82.4만명('10년 대비 2.7% 증가, 전체 고용의 7.7%)
- ✓ 수 출 : 603.3억 달러('10년 대비 1.9% 증가, 총 수출의 10.9%)
- ✓ 매 출 액 : 373조원('10년 대비 6.6% 증가)

<중견기업의 위상 (2011년 기준)>



자료 : 지식경제부

	평균 매출액 (억원)	평균 근로자 (명)	평균 업력 (년)	평균 수출액 (억원)	매출 성장률 (%)
2010년	2,763	659	23.18	921	14.38
2011년	2,706	580	23.04	974	6.6
증감 (% , %p)	△2.1	△12.0	△0.6	5.8	△7.8

자료 : 지식경제부

2

매출규모별 분포 및 성장추세

- ✓ 매출액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편차가 큼
 - 1천억 미만 700개(49.2%), 5천억 이상 203개(14.3%)
- ✓ 매출액 1천억원 미만과 5천억원 이상 구간에서 빠르게 증가
 - 매출규모별 연평균 증가율 : 1천억 미만 14.4%, 5천억 이상 16.7%
 - 1천억원~5천억원 구간 중견기업의 성장이 취약

<매출규모별 분포(2011년 기준)>

	'03	'05	'07	'08	'09	'10	'11	비중 ('11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07~'11)
1천억 미만	412	417	409	516	510	605	700	49.2%	14.4%
1천억~2천억 미만	186	208	210	215	208	208	225	15.8%	1.7%
2천억~3천억 미만	103	103	118	140	134	143	130	9.1%	2.5%
3천억~5천억 미만	79	88	117	130	139	154	164	11.5%	8.8%
5천억 이상	96	104	116	171	155	181	203	14.3%	16.7%
계	876	920	970	1,172	1,146	1,291	1,422	100.0%	10.0%

자료 : 지식경제부

3

중견기업의 절반이 상장업체

✓ 1,422개 사업체 중 694개(48.8%)가 주식시장에 상장('11.9)

- 유가증권시장 상장 : 381개사(26.8%)
- 코스닥시장 상장 : 313개사(22.0%)

<자산규모별 상장 현황> (단위:개, %)



주 : 2011년 9월말 기준, 괄호 안은 전체 상장중견기업대비 자산규모별 상장 비중
 자료 : 중견기업연합회(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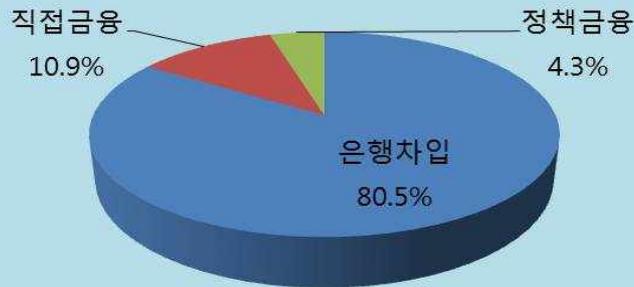
4

Ⅱ. 중견기업의 자금조달과 금융애로

자금조달을 은행차입에 주로 의존

- ✓ 은행차입 의존도(80.5%)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
 - 직접금융 10.9%, 정책금융 4.3%
- ✓ 중견기업의 48.8%가 상장기업이지만, 직접금융조달 비중은 10.9%에 불과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비중(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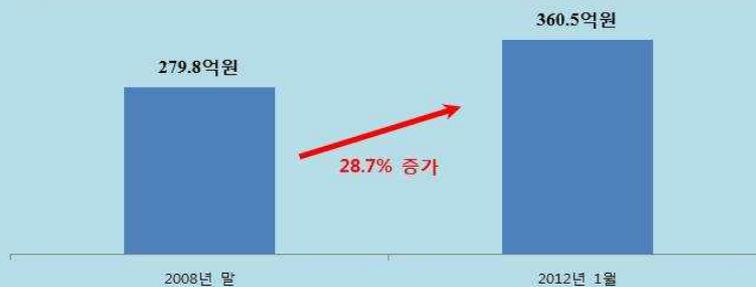
자료 : 중견기업연합회

6

평균 은행차입 규모의 지속적 상승

-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08년 이후 중견기업의 은행차입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 업체별 평균 은행차입금 : 279.8억원('08년말 기준) → 360.5억원('12.1)
 - 정책자금 이용 제약으로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

<업체별 평균 은행차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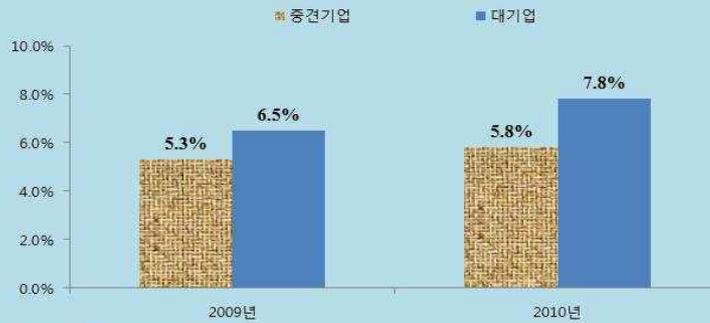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7

성장자금 총당에 역부족인 수익이 원인

- ✓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익성으로 경영과 성장을 위한 소요자금을 수익만으로 충당할 수 없어 은행차입 규모 증가
 - 매출액 영업이익률('10년 기준) : 중견기업 5.8%, 대기업 7.8%

<제조업 부문 기업 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비교>



자료 : 중견기업연합회(2011)

8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성장동력 정체

- ✓ 운전자금 차입 규모는 빠르게 증가, 시설자금 차입 규모는 '10년 말 이후 감소
 - 운전자금 규모 : 205.1억원('08년 말) → 271.2억원('12년 2월 말)
 - 시설자금 규모 : 74.7억원('08) → 101.4억원('10) → 90.5억원('11) → 86억원('12.2)

- ✓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나, 불확실한 경기상황과 자금사정 악화로 신규 투자 정체

<은행차입금 유형별 규모> (단위: 억원)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9

투자자금 수요 증가 vs. 자금조달 채널 제한 (1)

✓ 자금조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투자자금 수요는 지속 증가

- 총 설비투자는 '11년에 비해 소폭(2.0%) 감소 예상
- 중견기업만 0.7% 증가한 34.4조원의 투자 계획
('12년 설비투자계획조사, 한국정책금융공사, '11.12)

<기업 유형별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10년(실적)	2011년(잠정)	2012년(계획)	증가율*
대기업	841,950	910,052	891,584	△ 2.0
중견기업	311,571	341,397	343,823	0.7
중소기업	61,933	94,203	82,912	△12.0
투자총액	1,215,454	1,345,652	1,318,319	△ 2.0

* 증가율은 '11년 대비 '12년 증가율을 의미

자료 : 한국정책금융공사, 2012년 설비투자계획조사(20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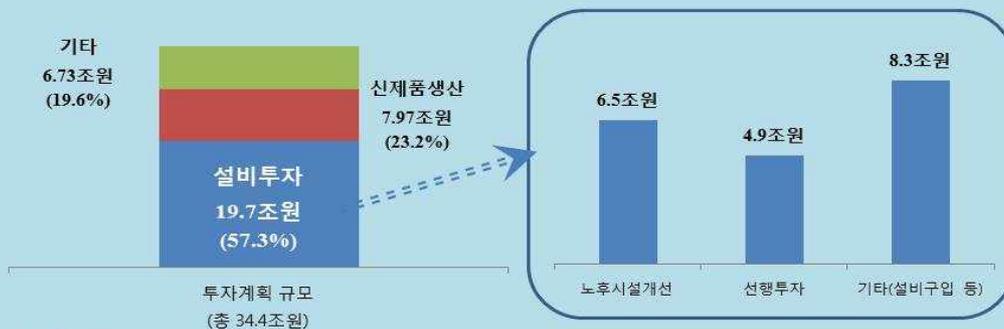
10

투자자금 수요 증가 vs. 자금조달 채널 제한 (2)

✓ 중견기업의 '12년도 총 투자계획 규모 : 34.4조원

- 설비투자(19.7조원) : 노후시설 개선 6.5조원(33.0%), 선행투자 4.9조원(24.8%), 기타 8.3조원(42.1%)
- 노후시설 개선과 선행투자는 지속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채널 마련이 시급

<2012년도 중견기업 유형별 투자계획>



자료 : 정책금융공사(2011)

11

투자자금 수요 증가 vs. 자금조달 채널 제한 (3)

✓ 투자자금 수요는 증가하나, 자금조달 채널은 오히려 제한됨에 따라 필요 투자의 적기 실행이 어려움

- 전환된 중견기업은 정책자금 및 신규 신용보증 중단, 기존 보증서 단계적 상환
- 채권발행금리 및 수수료가 증가로 직접금융 자금조달 비용 상승
- 특히, 관계회사 기준에 의한 즉시 전환 중견기업은 기업규모의 변화가 없음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애로 가중

12

설문조사 개요

【설문 목적】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금융환경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대 상】 중견기업 76개 업체

【기 간】 2012. 4. 9~4. 17

【조사 기관】 IBK경제연구소

13

설문응답 기업의 개요

【업력】 설문응답 중견기업의 평균 업력 : 25년

- 관계회사 기준에 의해 즉시 전환된 기업의 평균 업력 : 19년

【중견기업 편입사유】 응답업체의 67.1%가 매출액 성장에 의한 양적 기준으로 편입

- 관계회사 기준에 의해 즉시 전환된 기업 비중 : 28.1%

<중견기업 편입사유 유형별 분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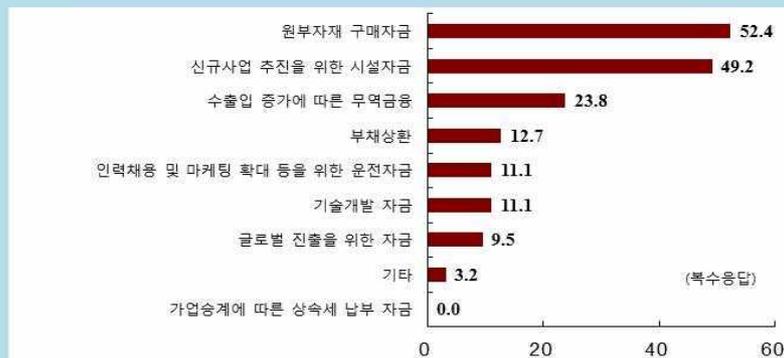
14

자금수요 동기

✓ 대다수의 중견기업은 원부자재 구매자금(52.4%)과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자금(49.2%)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관계회사 기준에 의해 편입된 중견기업의 경우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자금(64.7%)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중견기업의 자금수요 동기>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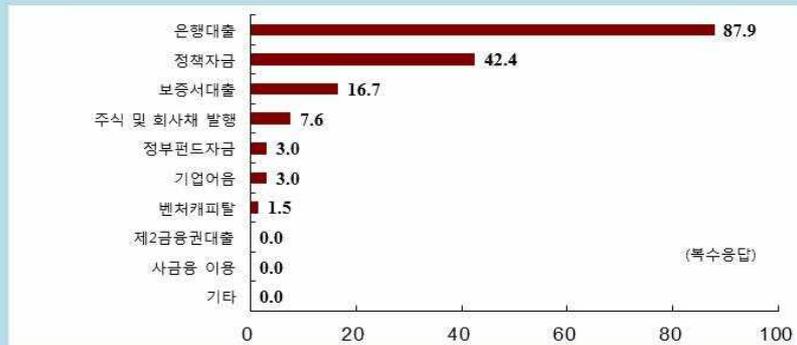


15

선호하는 자금조달 방식

- ✓ 중견기업은 은행대출(87.9%)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장 선호
 - 정책자금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42.4%)도 그 다음 순으로 선호

<중견기업이 선호하는 자금조달 방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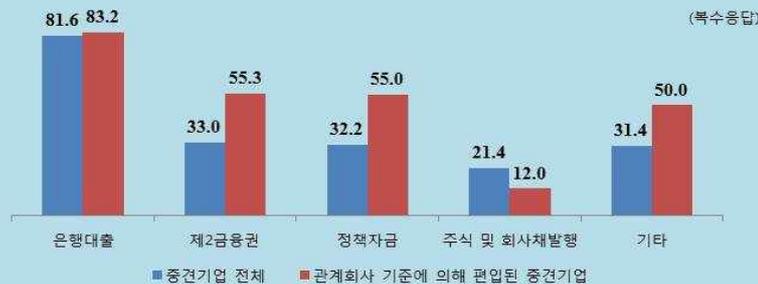


16

자금조달 방법별 조달규모

- ✓ 외부차입은 은행(81.6%)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음
 - 응답업체당 평균 외부차입규모 : 568억원
- ✓ 직접금융시장 활용도는 21.4%로 상대적으로 낮음
- ✓ 관계회사 기준에 의해 편입된 기업은 제2금융권과 정책자금 의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금조달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남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수단별 현황> (단위:%)



17

금융애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응답업체 중 72.7%는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금융애로로 인해 기업경영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응답

- 매우 타격(13.6%), 다소 타격(59.1%), 타격을 받지 않음(27.3%)

<금융애로로 인한 영향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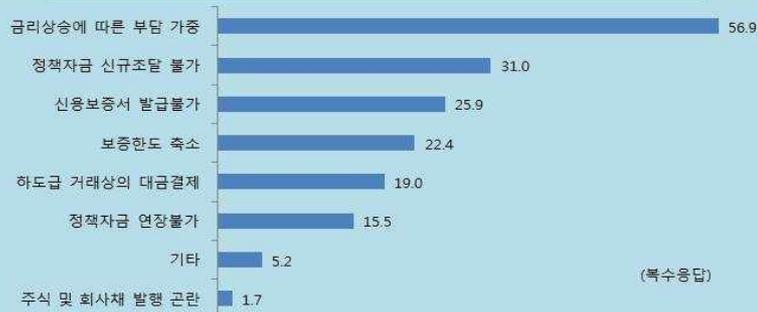
18

금융애로 원인

✓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 가중(56.9%)이 중견기업의 기업경영을 가장 어렵게 함

- 대기업 신용평가 모형 적용,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중단, 중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이 일반기업 대출상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리 인상
-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축소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원인> (단위: %)



19

분야별 금융애로 체감도

- ✓ 분야별로는 정책자금조달(59.1%), 보증서 발급(39.4%), 은행대출(36.4%), R&D자금(28.8%)에 대한 어려움 순
- ✓ 관계회사 기준으로 편입된 중견기업은 정책자금 조달(66.7%)과 은행대출(38.9%)로 인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중견기업의 분야별 금융애로 체감도> (단위: %)

	정책자금 조달	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R&D 자금	하도급 대금 결제	직접 금융	무역 금융	해외 진출 금융
어려움	59.1 (66.7)	39.4 (27.8)	36.4 (38.9)	28.8 (27.8)	27.3 (16.7)	24.2 (11.1)	19.7 (16.7)	13.6 (5.6)
보통	27.3 (16.7)	36.4 (50.0)	43.9 (38.9)	48.5 (50.0)	42.4 (50.0)	45.5 (61.1)	47.0 (44.4)	53.0 (61.1)
어렵지 않음	13.6 (16.7)	24.2 (22.2)	19.7 (22.2)	22.7 (22.2)	30.3 (33.3)	30.3 (27.8)	33.3 (38.9)	33.3 (33.3)

주 : 괄호는 관계회사 기준으로 중견기업에 편입된 기업의 분야별 금융애로 체감도를 의미

20

각 분야별 금융애로 사항 : 정책자금/신용보증 분야

- ✓ 정책자금에 관하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고충(63.9%)이 가장 큼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제한기업(또는 대출초과기업) : 매출액 500억 초과, 신용등급 BB 이상
 - 지원절차의 복잡성과 까다로움(34.4%), 보증서 발급이 용이하지 않음(21.3%)이 그 다음 순
- ✓ 관계회사 기준으로 편입된 기업군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 제외에 따른 어려움(76.5%)이 특히 큰 것으로 응답

<정책자금 조달에서의 금융애로 원인> (단위: %)



21

각 분야별 금융애로 사항 : 해외진출 분야

- ✓ 글로벌 진출 시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37.3%)에 따른 어려움
 - 무역금융 지원 대상(수출실적 기준 5천만 달러 이하) 초과로 일반대출 조달 시 금리 인상
 - 글로벌 진출 자금 지원 시 사각지대 발생
 - 정부기관 지원 대상 : 수출 5천만 달러 이상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KOTRA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점과 적기에 조달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려움도 각각 21.6%

<해외진출 분야에서의 금융애로 원인> (단위: %)



22

각 분야별 금융애로 사항 : 직접금융(회사채발행) 분야

- ✓ 회사채발행 과정에서는 높은 발행금리(26.1%)와 수수료로 인한 발행비용이 부담(21.7%)
 - 신보 보증 P-CBO 발행 시
발행금리 50bp 격차(신용등급 A 기준 중소 4.10% 중견 4.60%), 발행수수료 2배(중소 발행금액의 0.1% 중견 0.2%)
 - 발행절차의 복잡성과 까다로움(15.2%) 및 발행요건 미비(13.0%)도 애로 사항으로 지적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관련 금융애로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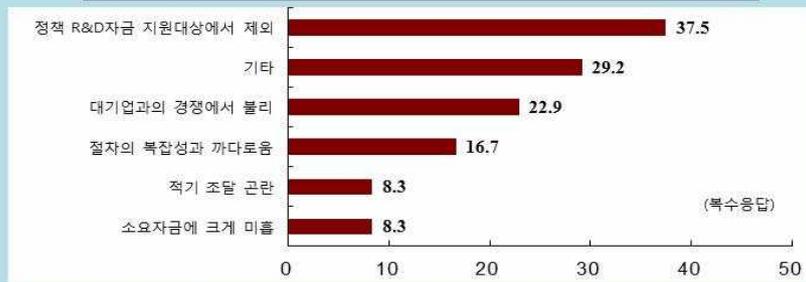


23

각 분야별 금융애로 사항 : R&D자금 분야

- ✓ 연구개발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37.5%)됨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큼
 - 연구개발 자금 지원 규모 축소 : 중소기업 전체 금액의 70% → 중견기업 50%
 -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료 증가 : 중소기업 20% → 중견기업 40%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22.9%), 지원절차의 복잡성과 까다로움(16.7%)도 그 다음으로 지적
 - 관계회사 기준으로 편입된 중견기업은 연구개발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46.2%)고 응답

<R&D자금 분야에서의 금융애로 원인> (단위:%)



24

중견기업 전환 후 지속 지원 희망분야

- ✓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공장 증축 등 시설투자(48.4%)와 설비구입(46.9%)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
 - 보증서 발급(26.6%), 무역금융(25.0%), R&D투자 자금(14.1%) 감축도 중견기업 전환 이후 단계별 시행을 통해 이행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

<중견기업 전환 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지원 희망분야> (단위:%)



25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중점지원 분야

✓ 금리인하와 은행의 중견기업 자금지원확대가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중이 각각 56.9%를 차지

-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서 발급(40.0%)과 신용대출 확대(24.6%)에 대한 요청도 높은 비중을 차지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중점지원 분야> (단위: %)



26

Ⅲ. 정책과제

정책과제 1

✓ 매출액 규모별로 세분화(Segmentation)한 맞춤형 정책

- 매출액 1천억 미만 소규모 중견기업이 절반(49.2%)
- 매출액 구간별로 정책수요에 차이(1천억 미만, 1천억~5천억, 5천억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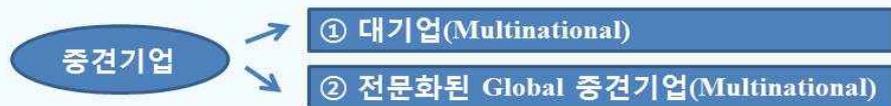
- 상위 구간 기업은 직접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 회사채시장 활성화(투자층 개발, 전문증권사 육성, 절차간소화 등)
 - 정보투명성 제고(공시, 정보공개 강화로 정보불균형 완화)
- 하위구간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연착륙 지원
 - 정책금융, 신용보증, R&D지원, 조세부담 등
 - 특히 관계기업으로 즉시 중견기업이 된 기업에 移行期間(Transition period) 부여

28

정책과제 2

✓ 중견기업의 성장 Path를 이원화

- 업종, 상품 및 시장특성, 기술전문화 수준 등 감안



정책과제 3

✓ 중견기업 정책은 성장을 위한 “애로 타개” 라는 시각으로 접근

- 중견기업은 이미 자생력을 갖춘 기업 : “보호 육성” → “성장 지원”
- Global 기업, 전문기업으로 성장에 필요한 애로 사항 해결에 중점
- 매출 1천억~5천억 구간 성장정체 기업군 지원

29

지 정 토 론

-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문승욱 (지식경제부 중견기업국장)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지정토론

권영준 교수 (경희대 경영학부)

- 발제문은 중견기업의 현황과 국민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기업이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자금의 조달에로 사향을 해결하도록 정책적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함.
- 사업체수(0.5%)나 고용측면(23.2%)에서 대기업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주체로서는 그 역할을 상실함: 중견기업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에 동의함.
- 중견기업군 내에서도 양극화가 존재함: 매출액 기준으로 1천억원 미만의 경우(2007년~2011년, 연평균 증가율 14.4%)와 5천억원 이상의 경우(2007년~2011년, 연평균 증가율 16.7%)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밖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성장이 취약함: 구조적 취약점 존재함.
- 자금조달경로의 후진성 존재: 중견기업의 48.8%가 상장사이지만 직접금융조달비중은 10.9%에 불과함. 은행차입이 80.5% 차지: 구조적 취약성으로 조달비용의 부담문제
- 산업양극화 및 기업양극화로 인한 열악한 수익구조로 설비투자 등의 자체성장자금조달의 애로사항 존재 -> 성장동력 정체의 악순환 구조
- 투자자금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채널의 제한으로 중견기업의 경쟁력 하락: 구조적 문제
- 설문조사 결과, 중견기업 스스로 선호하는 자금조달방식도 은행대출(87.9%)과 정책자금(42.4%)으로 후진적 Financing 방식임. 간접금융방식으로 금리인상에 매우 취약한 구조
-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부족, 특히 금융정책대상 선정기준의 사각지대에 노출됨.
- 회사채 발행과정에서의 과도한 발행금리 부담과 높은 수수료 부담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에서 애로사항 존재

- 중견기업 전환후에 지속성을 위한 일정기간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

□ 기업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의 정책적 선택의 중요성

- 경제민주화를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시대적 대명제
-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 중에서, 중소기업을 모두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비용과 중견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케 하거나 대기업으로 점프하게 하는 정책적 지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데의 애로사항과 중견기업이 글로벌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는데의 애로사항을 엄밀히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이 바로 대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을 통해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출액 규모별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함.
- “구조적 애로타개”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함.
- 정부의 직접적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인프라개선을 통한 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포지티브 접근법은 물론 네거티브 접근법인 사전규제와 사후규율의 확립도 매우 중요함.
- 현재 대선후보 모두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진일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실현된다면 동반성장의 새시대를 기대할 수 있음.

지정토론

이병기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1. 중견기업 및 정책의 현황

최근 정부는 산업발전법 등 법개정을 통해서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최근에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

- 중견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이하의 사실상 대기업군
 - 지금의 분석은 중소기업→중견기업 이행 시 새로운 규제증가, 혜택축소로 중견기업으로의 이행 및 성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고
-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을 통해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경제불확실성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성장동력 정체
- 노후설비 개선과 선행투자는 지속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채널마련이 시급
 - 중소기업에서 받던 혜택의 연장 및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산업발전법에도 반영하여 입법
- 제3항에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중견기업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및 실증분석없이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2. 현행 중소기업→중견기업 정책의 문제점

가.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과다성

- 중소기업의 성장인센티브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지원혜택

- 대출금리 우대 등의 정책자금 지원정책, 조세지원정책, 정부조달정책 등 다수의 지원 제도로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꾀리는 제도적인 걸림들로 중소기업들이 지적하는 것은 조세부담
-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12)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 수는 총 32건
- 대만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17.5%로 동일
- 중소기업 유지를 위해 자회사 설립 및 분사, 임시근로자 고용증대 등 편법 사례 발생¹⁾
 - 현재 프랑스 중소기업 정책은 지나치게 다양하고, 다수 수혜자에게 미미한 예산 나눠주기 식으로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들어, 다수의 지원정책을 통·폐합하는 개혁조치를 도입 중에 있음.
- 기업 설립을 위한 지원정책 수를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분야를 한정하고 지원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며, 3년 후 의무적으로 효율성 평가를 실시

나. 대기업 진입에 따른 규제강화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받는 다양한 형태의 제약이 존재
- 인력규모에 따른 기업규제는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해고, 근로시간 규제 등 근로기준법 상의 강행규정
- 300인 이상에서 장애인고용의무, 보육시설설치의무 등 약 25가지의 규제 추가(김시정, 2009)
 -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18조에 의한 총량규제 부과

1) 대한상공회의소(2009)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추가적인 규제로 중소기업이 중견이 되지 않으려는 경향

다. 중견기업의 국제화 및 R&D투자 미흡

- 중소기업이 글로벌화를 통해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할 수 있으나,²⁾ 중소기업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국제화 노력이 미흡
-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고 최근 그 비중이 현저히 저하
 - 2001년 전체 수출액의 약 42.9%를 점하던 중소기업의 수출은 2008년에는 전체수출의 30.9%로 감소
 - 2010년의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약 13.4%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기업의 수출 비중은 2001년 57.0%에서 2008년 약 69.0%로 약 12%포인트 증가
 -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의 해외투자 비중은 증가
- 중견기업은 R&D 투자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투자 필요
 -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높은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
 - 수요기업과의 안정적인 거래관계 구축과 시장지배력 확대로 추가적인 R&D 필요성 낮은 상황

3. 고도성장(Gazelles)형 중견기업 정책의 방향

- 현재의 직접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과는 달리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성장 정책으로 전환
 - 신규기업 진입장벽 제거에서 기업 성장장벽 제거
 - 신생기업의 양적 확대정책에서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질과 성장촉진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서 기업성장환경의 개선
 - 보조금지급 등 금융지원방식에서 R&D 자금 및 혁신자금 공급
-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책금융 지원이 중견기업에 연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2) 헤르만 지몬, 『히든 챔피언』, 흐름출판, 2008.

은 정책선택

-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보호가 주어지고 있고 또 정책의 비효율성이 높은 상황
 -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창업초기 혁신형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 활용을 활성화
- 중소기업지원 이력제 추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과잉 지원의 억제
 - 자금공급원으로서 은행편중 현상의 개선
 - 회사채 등의 직접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량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형 중견기업의 사업화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필요
 - 중견기업 설비투자 촉진 및 M&A 확대를 위해 메자닌금융 및 P-CBO 활용확대
 - 중견기업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
 - 생존 중소기업은 창업단계를 지나 성장경로 상 제1전환점이 나타나기까지 평균적으로 설립 후 8년 이상 소요되며 제1전환점이 나타나기까지 평균적으로 업력 약 200개월 시점까지 성장의 정체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성장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분석³⁾
 -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정책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시장확대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이것은 현행의 중소·중견기업 정책이 지원·보호 보다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시각에서 조세·금융·R&D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 중견기업의 외국인직적투자 투자 확대와 기술확산 확대 노력 필요
 - 독일 히든 챔피언이 좁게 정의된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글로벌화하였던 것처럼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보다는 중견기업 글로벌화나 환경조성 정책 필요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확대 및 국제화 추진
 -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활성화
 - 중소·중견기업의 시장확대 및 국제화는 이들 기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증진

3) 노용환(2011)

지정토론

전현철 상근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육성과 금융정책 과제에 대한 논평”

동학림 수석연구위원의 발제문은 중견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금융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중견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해 금융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및 법제 정비 시급

- 발제자는 한국경제에 대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이러한 대기업 집중은 경제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본 토론자도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함.
- 한국은 99.9%가 중소기업이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0.1%에 불과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가 많아져야 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수도 증가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해 주어야 함. 또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중견기업 개념을 타 법령에 반영해야 함.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정책 과제

- 정책과제로 매출액 규모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면서 상위구간 기업은 직접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하위구간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연착륙 지원을 주장하고 있음.
- 큰 틀에서는 동의함. 다만, R&D는 상·하위 구간에 관계없이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

함. R&D 투자확대는 신기술개발 등으로 인해 제품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는 등 선순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 기업규모가 작은 하위구간 중견기업의 신용보증정책 필요. 신용보증기금이 중견기업을 지원하는데 법적 제약은 없으나 중소기업을 우선 보증하도록 하고 있어 중견기업이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
- 일반보증한도는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가능
- 그러나 최고보증한도 제도의 경우 중견기업을 위한 제도는 이행보증과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2가지(이행보증,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밖에 없음(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신용보증의 경우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견기업도 우선 지원 대상 포함.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자금수요가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증 한도를 최고 200억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표] 최고보증한도 제도 현황

보증 종류	대상기업 범위	관련 규정
담보후취에 따른 보증해지 후 보증잔액이 제21조의 일반보증한도 이내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보증		신용보증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받는 대출에 대한 보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자금에 대한 보증운용 기준
기업의 구매자금유에 대한 보증	중소기업(단, 기업구매자금대출보증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한 법인, 단체 제외)	구매자금유보증 운용기준
이행보증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	이행보증 운용 기준
전자상거래대출보증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제2금융보증	중소기업 (중기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한 법인, 단체 제외)	전자상거래보증 운용기준
전자상거래담보보용보증	중소기업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보증	표준산업분류상 지식기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식기반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
발주서방식 Network Loan 보증	신보와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선정한 모기업과 거래기간이 1년이 경과한 기업으로 모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	Network loan보증 운용기준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녹색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기업 제외)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
무역금융에 관한 보증	중소기업 (중기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한 법인, 단체 제외)	
수입신용장개설에 대한 보증	중소기업	수출입금융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
환어음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중소기업	
환어음매입에 대한 보증	중소기업	

출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업무 운용기준』, 2012 및 신용보증규정 제22조

제2부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중견기업의 역할

박정구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I 서론

□ 최근 '중견기업'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며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 2005년 이해훈 의원이 중견기업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였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음.
- 이후에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 관련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
 - 2009년 7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정책개선과제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음.
 -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에 대한 수급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 입법청원을 하였음.
 - 최근 대선주자들도 '중견기업'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견기업의 중요성을 언급
- 정부도 2010년 3월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였음.
 - 위 육성전략은 기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 정책패러다임으로 인해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주체로 인정하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방안을 마련함.
 - 위 육성전략에서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등 5대 핵심전략, 9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이후 정부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 5월에는 중견기업 정책추진 전담조직인 지식경제부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는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함.
 - 다만 금융업과 보험업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함(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추진전략	정책과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①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정책근거 마련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② 조세부담 완화: 최저한세율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 지원 확대 등 ③ 금융부담 완화: 기업은행 금융거래 유지, 보증만기도래 부담 완화, 무역금융 부담 완화 ④ 성장지원 자금조달 프로그램 도입: 정책금융공사를 활용한 장기설비자금 등 지원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⑤ 기술역량 강화: R&D지원 확대, 사업화 촉진,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 ⑥ 독일식 기술확산시스템 전면 도입 ⑦ 전문인력 지원 확대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⑧ 해외정보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패키지형 마케팅 지원서비스 신설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⑨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Package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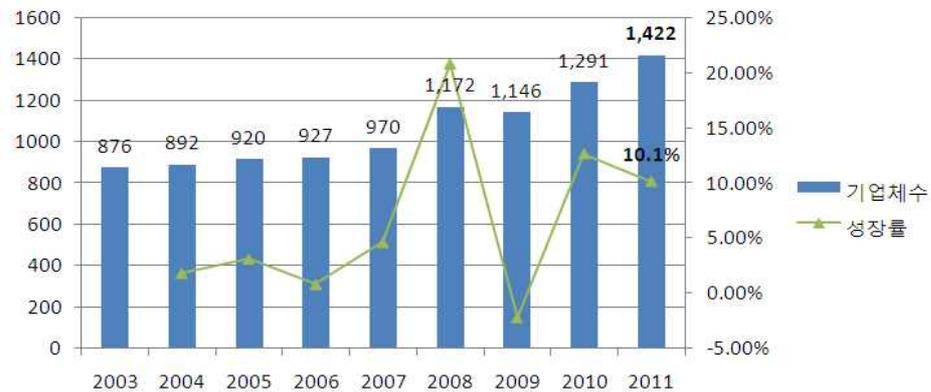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체결 대상으로 명시함. (동기준 제3조)
 - 현재 중소기업은 공정거래협약에 따라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받고 원가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등 하도급 거래 보호를 받음.
 - 이는 현행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을 활용해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파트너로서의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처럼 대기업과의 하도급분쟁에서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II. 중견기업의 현황 및 정책

1) 중견기업의 현황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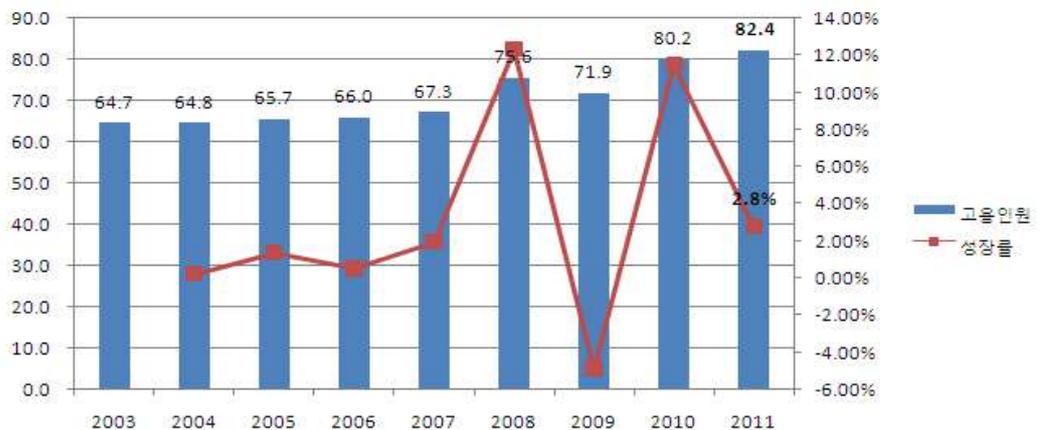
□ '11년말 중견기업은 총 1,422社로 전년(1,291개) 대비 131개(10.1%)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세

○ 특히, 신규로 진입한 중견기업수가 316개로 '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다 규모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49개(38.6%), 비제조업이 873개임.



□ 중견기업은 기업수로는 전체의 0.04% 수준에 불과하나, 일자리 및 수출 창출의 주역임을 다시 한번 입증.

○ 고용인력은 82.4만명으로 총 고용인력의 7.7%를 차지하고, '07~'11년간 고용증가율은 5.2%(15.1만개 증가)로 동기간 대기업 고용증가율 4.3%(20만개 증가)를 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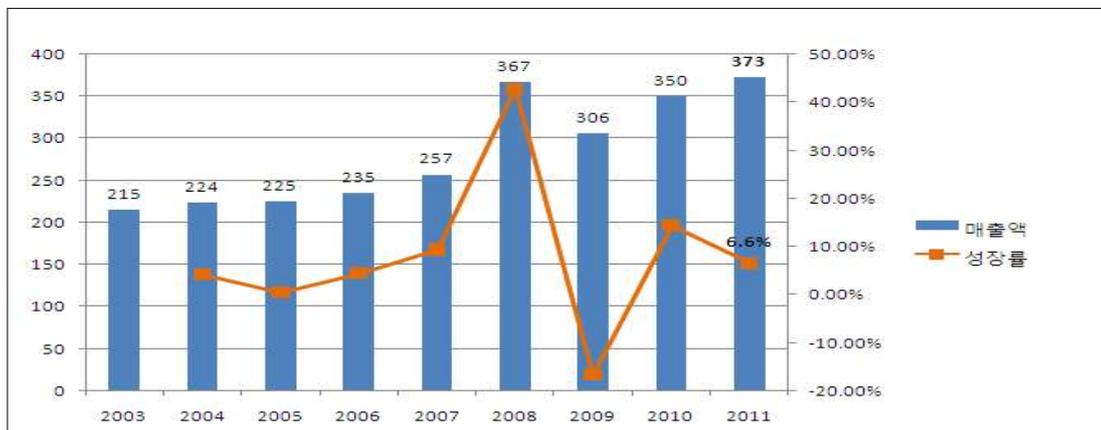


4)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2.10.29), 「2011년 중견기업 통계 조사 결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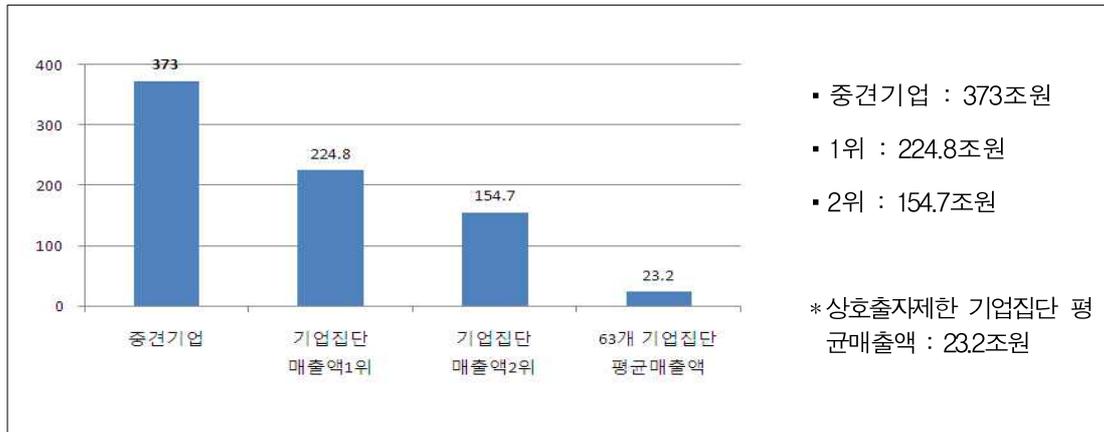


- 수출액은 603.3억 달러로 총 수출의 10.9% 비중이며, 제조업 중견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26.4%로 '07년(9.93%) 대비 2.7배 증가.
- 하도급은 완제품생산을 위한 공정을 여러 기업이 분담하는 기업간 분업에 의한 생산방식임.
- 현재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기업간의 분업으로까지 확대됨. 즉 하나의 완제품 제작이 한 기업내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생산공정을 분할하여 여러 기업들이 개별 공정을 분담하는 단계에 이름.
- '11년 중견기업 매출액은 373조원('10년 대비 6.6%증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매출액 1위 및 2위보다 훨씬 큰 규모

< 중견기업 매출 현황 (단위:조원) >



< 매출 규모 비교 (단위:조원) >



□ '11년도 중견기업의 평균지표

주요 지표	전산업	
	전산업	제조업
평균매출액	2,706억원	4,277억원
평균수출액	88백만불	122백만불
평균종사자수	580명	673명
평균 업력	23.04년	27.80년

2) 중견기업정책의 현황5)

□ 정부는 금년 8월 9일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함.

○ 중견기업 육성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경제의 필수적 과제를 천명함.

□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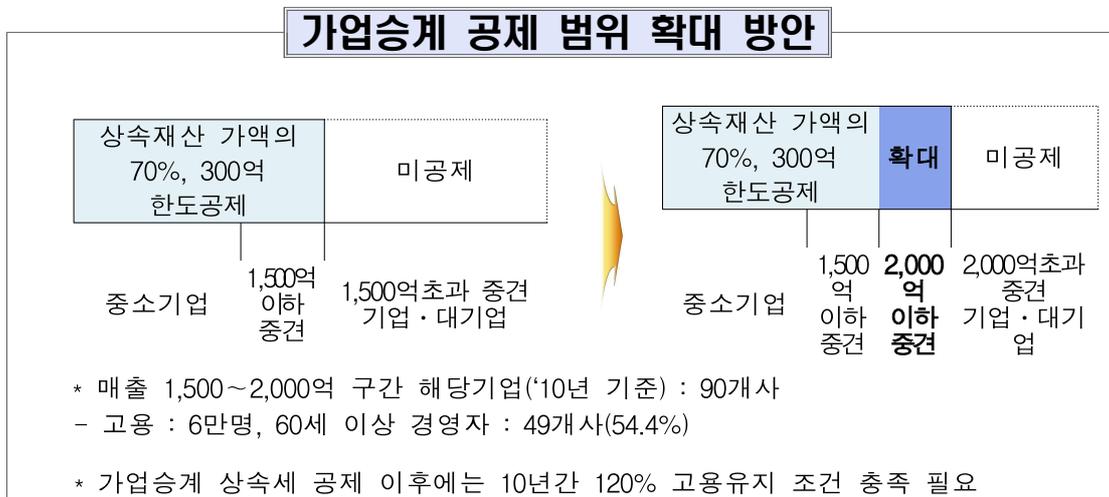
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에 따른 핵심 부담 완화

5)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2.8.9), 「중소기업이 희망, 중견기업 3,000개 만든다」 참조

-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

< 가업승계 >

- 장수 전문기업 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현재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13년부터 2,000억원 이하까지 확대
- 이는 기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던 상한선(매출 1,500억원)이 중소기업 졸업기준(3년 평균 매출 1,500억원)에 맞추어져 있어,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졸업 시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함임.



< 하도급 >

-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동반성장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중견기업연합회의 실태조사('12)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인 경우 평균적으로 대급을 지급받는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가 30%에 달함.
- 정부는 하도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준」을 개정하여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상으로 포함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 하도급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임.

하도급 제도 개선 방안

◆ 하도급 현황

- 중견기업은 2~3차 협력사(중소기업)에게 60일 이내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부 대기업들로부터는 90~120일 어음을 받는 등 자금애로 발생
- * 중견기업이 하도급시 평균결제일 : 60일 이상 29.7%(중견기업연합회, '12)

◆ 개선 방안

- 기업간 협상력 차이에 맞는 제도운영을 통한 공정거래 촉진
- * (現) 대-중소 및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 (개선) 대-중견 및 중견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추가인정 추진

< R&D 세액공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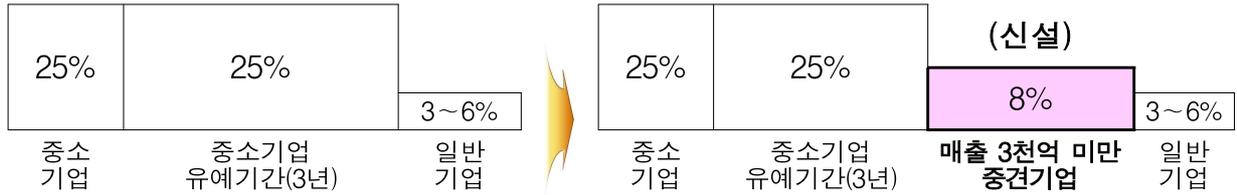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구간을 8%로 신설
- 지난 '11년부터 중소기업 졸업 이후 연구개발 세액공제 부담완화 기간(5년)을 신설 하였으나, '10년말 이전에 졸업한 기업은 3~6%의 기존 대기업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 받아 중소기업과의 지원 격차가 매우 큰 상황
- 이번 공제구간 신설에 따라 '10년말 이전에 졸업한 중견기업과 '11년 이후 졸업기업으로 5년간 부담완화 기간이 경과한 기업들은 매출 3천억원 미만까지 8%의 신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어, R&D투자 활성화 기대
- * '10년 기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950여개 수준

< 금융애로 해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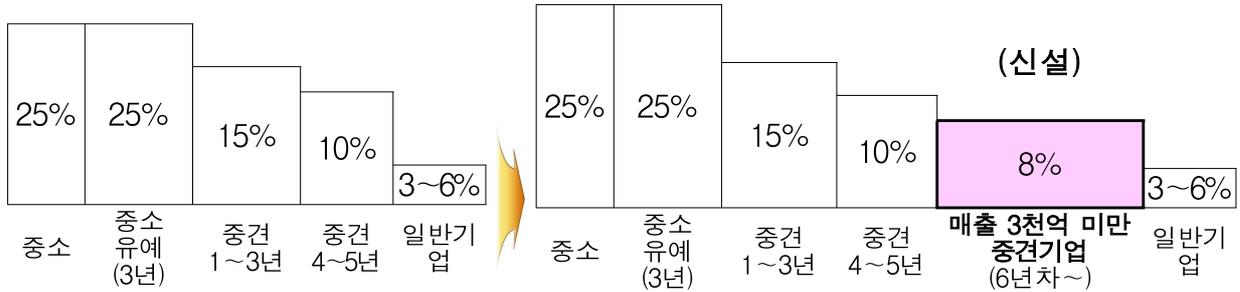
-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중견기업 초기에 자금난에 노출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의 중견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임.

연구 ·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개편안

◆ '10.12.31일 이전 졸업기업



◆ '11.1.1일 이후 졸업기업



< 인재확보 시스템 강화 >

-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에 해당하는 인재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의 인식개선, 근무여건 개선 및 장기재직 지원 등을 중점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기술개발 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

-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10년 1.6%에서 '15년 6%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이 주관 가능한 R&D과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임.

< 시스템 경영 및 글로벌화 가속화 >

- CEO가 인사, 재무, 마케팅 등을 모두 담당하는 1인 경영체제에서 탈피하여 중견기업 규모에 맞는 시스템에 의한 경영체제를 보급하는 사업 추진

- 채권발행, 주식 상장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금융캠프를 개최하고 연기금의 중견기업 회사채 투자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임.
-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FTA 수혜업종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FTA프론티어 사업을 추진하고, 방산분야의 질충교역 연계사업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수출확대를 지원

< 업종·지역별 중견기업 육성 >

- 기술전망, 국내외 시장분석 등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 이외에도 중견기업이 선도할 수 있는 신규 전략업종을 발굴하여 기업별 특성에 맞는 육성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 또한 현재 추진중인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하여 광역권별 특성에 맞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역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확충 >

- 기업애로 해결, 연구조사, 정책개발 등 중견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를 금년내 설치할 계획임.
- 이와 동시에 업종별 협회·단체, 출연연, 대기업 등 업종별 지원체계와 산업기술진흥원, 코트라, 금융기관 등 각종 지원기관과 연계한 중견기업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현재 시행중인 법령·정책·지원사업 등을 검토하여 기존 대·중소기업 이분법적 체계에 중견기업 개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임.
- 또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업이 중견기업 확인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III 중견기업의 역할과 중견기업육성의 필요성

1) 기업환경의 변화와 중견기업육성의 필요성

□ 경제위기이후 세계 신산업질서 형성과정에서 한·중·일 분업구조가 전면적 경쟁구도로 급변하여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됨.

○ 그간 한·중·일 3국은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2000년대 중반이후 조립·장치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은 약화되고 중국은 급격히 부상하는 반면 한국은 정체됨.

- 향후 한·중·일 경쟁구도 변화속에서 조립·장치산업 중심인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조립·장치산업부문은 결국 중국으로 이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는 반면, 일본은 조립장치부문 약화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부품·장비·소재를 기반으로 하여 상대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는 생산원가의 절감, 단품 발주, 높은 모기업 전속성, 수급기업의 소규모화의 특징을 갖는 수직적 협력관계에서 다방면에서의 경쟁력의 강화, 모듈화, 개방적 수급거래, 수급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의 특징을 갖는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되고 있음.

□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중견기업군이 취약하여 기업 분포가 극심한 침탑형 구조임.⁶⁾

○ 특히, 중견기업군의 비중이 美·일에 비해 크게 낮음.

※ 사업체 기준 중견업체군 비중('05, 제조업 기준)

- (사업체수) 美 2.4% 日 1.0% 韓 0.2%, (고용) 美 14.4% 日 15.3% 韓 8.1%

6)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0),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 한국형 Hidden Champion 2020년까지 300개 육성 -」에서 인용.

< 기업체 규모별 업체 수 및 고용 비중('07년 기준 추정치) >

(단위 : 개사, 명)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¹⁾	대기업 ²⁾
기업체 수 (비중)	2,950,967(99.9%)	1,877(0.06%)	132(0.004%)
제조업	318,258(99.8%)	662(0.2%)	78(0.02%)
종업원 수 (비중)	10,726,610(85.0%)	1,079,847(8.6%)	809,504(6.4%)
제조업	2,405,138(71.7%)	386,314(11.5%)	564,514(16.8%)

1) 중견기업 : 非중소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또는 종업원수 1,000명 미만 기업

2) 대 기 업 : 매출액 1조원 (and) 종업원수 1,000명 이상 기업

※ 통계 분석을 위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 범위를 임시적으로 설정

○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도 거의 정체됨.

- 1997년 당시 중소기업 중 2007년 현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사에 불과함.
- 1997년 당시 중소·중견기업 중 2007년 현재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28개사에 불과하며(中小→大 2개, 中堅→大 26개), 이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기업(21개사), 외국인 기업(4개사)을 제외한 독립적 대기업은 3개사(풍산·오뚜기·이랜드)에 불과함.

□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중견기업의 역할

- 동반성장은 대·중견·중소기업들이 미래의 성장기회를 함께 나누고 우리나라 산업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중견기업정책은 단기적 이익추구가 아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간의 상호협력과 성장을 통해 공동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 이를 위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기업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주체로서의 역할, 즉 동반성장을 위한 교량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음.7)

7)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연구원 합동 릴레이 정책세미나 - 동반성장에 있어서 교량역할 강화방안 -」 참고.

-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금년 8월 9일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함.
- 이는 중견기업 육성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경제의 필수적 과제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특징과 중견기업육성의 필요성

□ 부품조달체제의 네트워크화의 진전

- 경쟁과 개방의 시대에는 기업의 규모보다는 기업들을 연결시키는 기업간의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며, 권한이 분산된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생산단위의 핵심임.
 - 네트워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수직적 유대관계의 형성을 취하거나 동질적인 중소기업을 묶어주는 수평적 유대관계의 형태를 취함.
 - 경쟁과 조화속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갖게 됨.
- 부품조달체제의 네트워크화의 특징
 - 외주확대 및 모듈화·시스템화를 통한 부품업체의 기능강화
 - 세계적 조달확대를 포함한 복수발주와 계열관계를 초월한 부품업체의 공유로 대표되는 개방적 거래관계
 - 상호협력관계가 강조되는 부품업체와 조립업체간 협력강화

□ 하도급거래관계의 변화와 대응

- 다품종소량생산시스템과 기술혁신의 진전은 하도급구조의 복잡, 중층, 다각화경향을 촉진시켜 수급기업의 보다 효율적인 생산가공시스템에 대한 요구 증대
- 정보화, 서비스화 등 경제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진전으로 인해 모기업과 수급기업에게 새로운 대응을 불가피하게 함. 따라서 모기업이 경제구조의 고부가가치화, 기술혁신 등에 점차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1차 하도급거래 기업에게는 종래의 종합적 생산가공능력 등의 기능을 점차 전가시키고 모기업은 기획·연구개발력, 판매력강화를 가속화해 가고자 할 것임.

- 모기업의 국제화·개방화와 더불어 세계화전략의 적극적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높은 기업간 시스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글로벌 아웃소싱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급구조를 고려해야 함.
- 수급기업의 입장에서는 모기업의 이러한 변화에 따른 유연한 생산시스템의 구축이 불가피하여 하도급관계의 중층화가 진행되어 갈 것임.

□ 우리나라 하도급거래구조의 특징

- 우리나라 하도급구조는 단층적 분업구조,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경우 전속적 특징과 수급기업의 전문생산시스템의 유인이 적은 배타적 계열관계를 특징으로 함.
- 국내 하도급구조는 다원적 단층하도급구조로서 중핵적 중간기업의 부재로 하도급거래의 중층화가 정해되고 있으며 배타적 전속화 및 복잡한 거래관행으로 비용낭비가 큰 구조임.

□ 하도급거래구조의 개선방향과 중견기업육성의 필요성

- 효율적 하도급구조의 구축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주도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과 함께 중핵적 중간기업의 육성 및 하도급구조의 재편성이 필요함.
- 따라서 1차 하도급단계 수급기업수의 적정화를 수반하는 중층적 분업구조로의 개편, 조립기업의 관리비용 및 조립비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며, 발주통합화 등 1차하도급단계기업의 적정규모화를 조성하고 이들 업체간에 경쟁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부품의 공용화·표준화 및 배타적 계열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의 수급기업의 전문생산시스템구축을 통하여 하도급거래구조 전체의 혁신을 통한 효율적 제고도 중요함.
- 따라서 효율적 하도급구조의 구축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주도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과 함께 중핵적 중간기업, 중견기업의 육성이 필요함.

3)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

□ 중견기업육성 논의와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의 관련성

- 중견기업은 현행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규모 기업집단 만큼의 경쟁력이나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으로 볼 수 있음.

- 중견기업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상으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중견기업은 실질적인 대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규모 및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편임.
- 중견기업지원정책에 관한 논의는 현행 중소기업정책 등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의 개선 논의와 관련하여 파악하여야 함.
 - 현행 중소기업정책 등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전제로 수립·집행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의 지위를 벗어나는 순간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고 오히려 규제의 대상이 됨.
 -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법인세 등 32건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정책금융 등 160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⁸⁾
- 현행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등 기업지원정책의 이분법적 구분에 의한 적용범위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 잔류유인을 제공하고 있음.⁹⁾
 -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유예제도¹⁰⁾ 적용기업 중 58.9%가 중소기업으로 복귀를 희망하였다는 설문조사결과를 제시¹¹⁾
 -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조사된 바 있음. 중소기업연구원의 2008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대상기업 중 중소기업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17.2%가 자회사 설립(유예기업, 40.5%), 15.3%가 아웃소싱(유예기업, 24.3%), 13.6%가 임시근로자 채용(유예기업, 18.9%)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¹²⁾

□ 소결

- 중견기업지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자칫 중견기업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음.

8) 매일경제, 2012.07.31 「매경데스크 어느 중견기업의 눈물」

9) 경기개발연구원, 「중견기업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2009.11.

10) 중소기업유예제도는 기업규모의 확대나 법규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지위를 벗어나는 기업들에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 지위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함.

11)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2006.3.

12)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운용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2008.5.

- 중견기업은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확대는 결국 정부의 기업지원대상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또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 등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대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중견기업지원제도의 도입 논의는 현행 중소기업정책 등 정부의 지원정책의 개선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
- 중견기업정책의 지원대상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중견기업지원정책의 정책효과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의 대기업계열사나 기존의 중소기업과의 역차별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중견기업지원제도의 도입 논의는 대기업·중견·중소기업간 상생적 협력관계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상생적 협력관계의 유지·발전은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모두의 수익극대화와 지속적 성장이라는 기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지속가능하기 때문임.

IV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1)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생적 협력관계의 구축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하도급체계의 구축 필요성

- 기업환경의 변화로 생산원가의 절감, 단품발주, 높은 모기업 전속성, 수급기업의 소규모화의 특징을 갖는 수직적 협력관계에서 다방면에서의 경쟁력의 강화, 모듈화, 개방적 수급거래, 수급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의 특징을 갖는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모하는 하도급구조의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하도급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함.

새로운 하도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그 동안 하도급관계는 대기업=강자, 중소기업=약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하도급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측면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음.
- 최근의 거래비용이론은 하도급관계가 갖는 경제적 합리성을 규명하려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함. 그러나 거래비용이론은 계약의 역할이 매우 제약되어 있어 극단적인 경우 계약서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한국식 하도급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
-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영성한 계약으로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한국식 하도급관계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임. 따라서 법률, 제도 등 공식적 제도를 통한 기업간의 신뢰를 증시하는 신제도학적 접근이 거래비용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 효율적 하도급구조의 구축방안

- 국내 하도급구조의 바람직한 구축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과 함께 중핵적 중간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공정한 하도급구조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
- 하도급구조의 고도화는 중소기업의 기술적, 경영적 성장에 달려 있으나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됨.
 -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기업협력의 네트워크간 경쟁을 위한 상생협력파트너라는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기존 거래관계에서 존재하는 운영방식, 관행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조화의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중소기업도 변화된 환경에의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투자와 전략적 제휴, 기업간 기술공유 및 공동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독자기술, 기술능력, 핵심역량의 확보가 필요함.
-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또는 중견기업정책은 현존하는 중견·중소기업의 보호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시장참여자까지 고려한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기업경쟁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삼아야 함.¹³⁾
 - 시장경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쟁이 일어나고, 진입과 퇴출이 역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시장자체가 구조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장메카니즘에 대한 신뢰가 필요
 - 따라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보조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13) 김인호/김종일, 「시장원리와 한국의 경제운용」, 중소기업연구원, 2007. 142면.

- 또한 정부는 공정거래의 확립을 통해 왜곡된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관습, 관례 등이 생성되고 새로운 기업간 협력과 경쟁의 규칙이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엄격한 집행이 필요
- 이를 통하여 기업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하도급체계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조성이 가능하리라 사료됨.

2) 중견기업육성정책을 위한 제언

(1) 경쟁친화적·성장친화적 중견기업정책의 수립

- 중견기업육성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보조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쟁정책형 중소기업정책으로서 공정한 환경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질서하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상생적 협력파트너로서 상생적 분업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중견기업지원제도의 도입논의는 기업의 성장과정을 반영한 성장친화적 기업정책이 필요함.
 - 단순히 기업지원대상의 확대라는 협의의 관점보다는 바람직한 기업지원정책의 방향 설정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이 아니라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 등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를 어는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¹⁴⁾
- 기업의 발전단계별로 차별화되고, 기업들에게 성장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
 - 따라서 기존의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정책과 달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형태의 지원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정책의 경쟁친화적 효과나 기업성장·발전에 대한 정책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

14) 경기개발연구원, 「중견기업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2009.11.

-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를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차별화된 기업지원정책의 도입가능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가칭 중견기업법의 제정 등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 봄.
 - 중견기업법의 제정 논의도 경쟁친화적·성장친화적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진행하여야 함.
 - 특히 중견기업법의 적용대상이 대는 기업의 범위 확정에 따라 지원내용이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기존의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내용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공정한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의 구축

- 대·중소기업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의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임.
-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거래과정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질적 협력의 증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의 재설계가 필요
 - 이와 관련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확립을 통해 왜곡된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관련제도, 관습, 관례 등의 생성 및 새로운 기업간 협력과 경쟁의 규칙이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상 규제의 집행 강화와 제도정비가 필요
- 대·중소기업간 거래공정화를 위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의 확대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체결 대상으로 명시함.
 - 이는 중견기업이 현행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을 활용해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파트너로서의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처럼 대기업과의 하도급분쟁에서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향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수급사업자로 인정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대·중소기업간 거래공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하도급거래기업에 대한 엄격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필요

- 이와 더불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와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범정부차원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부조달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거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협력한 원수급사업자에 대한 가점제 부여를 통하여 공공공사 발주가능성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와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 정 토 론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김홍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홍기영 (매일경제신문 증권2부장, 경제경영연구소장)

황민호 (법무법인 한민 변호사)

지정토론

홍기영 부장 (매일경제신문사 증권2부장 겸 경제경영연구소장)

“ 중견기업 제대로 육성하려면 ”

현재 우리나라엔 300만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이 중 제조업체는 30만개.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체급을 올린 기업은 고작 1,300개. 전체 제조업체의 0.4%에 불과하다. 이처럼 산업 생태계의 허리를 담당해야 하는 중견기업이 취약하다.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곳이 중견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상시근로자 300~1,000명에 3년 이상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는다. 이 같은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이 성장성 한계에 직면했다.

대한상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353곳 중 39.7%가 주력사업 성장여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의 주력사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5.8%에 달한다. 중견기업이 성장동력을 계속 잃어가면 대·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호리병형 산업구조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크는 산업 생태계 성장판이 닫혀가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기업은 법인세 등 32건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정책금융 등 160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계속 누리고자 성장 포기, 사업 부문 분사 등 편법이 동원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산업정책으로 소외돼 왔다.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산업구조는 크게 왜곡되고 말았다. 중견기업 수는 현재 1300여 개로 전체 기업의 0.04%에 불과하다. 그래도 일자리는 8%에 해당되는 80만 2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국도 신설했다. 중견기업을 2015년까지 3,00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하도급제도를 개

선하고 연구활동비 세제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숫자에 너무 얽매이다간 아무런 성과없는 지원책에 그칠 수 있다. 하나라도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정부 간 정책 공조가 어긋나고 법 적용이 상충되는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경제민주화 바람에 중견기업까지 희생양이 될 판이다. 대표적으로 꼬인 대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들 수 있다. 이제 갓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빚어진다. 대기업 적용 범위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에는 시장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못 된다. 차제에 상충되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 육성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글로벌화에서 찾아야 한다. 중견기업이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지 말고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앞으로 세계시장을 제패하는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글로벌화를 돕기 위해 코트라는 '월드챔프'라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선진국 기업과 품질·디자인·기술 경쟁력 격차를 축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인 스스로도 기업가정신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중소기업인에게 "하면 된다"는 희망의 미래상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중견기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날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지정토론

황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민)

1.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현실

전체 기업 수의 99.9%(약 300만개)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 있어,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발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1997년 이후 외자기업과 대기업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단지 3개사(풍산, 오투기, 이랜드)만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성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업의 자생적 성장경로가 붕괴된 것은, 경제·사회적 자원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다수의 기업에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춤형 성장정책을 위한 기본전략으로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을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솔직하게 구분하고, 지원방법을 차별화하는 다원화된 제도와 정책의 기본 틀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2. 對 대기업과의 관계 - 보호의 객체

가. ‘(가칭)중견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중소기업과 같은 보호를 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하도급 관계 외의 중견기업을 고려할 때 미흡한 조치다. 고용, 조세 등 현실에서의 위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육성 및 보호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은 정부 시혜적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정부조치와 달리, 법률에 근거한 육성정책이 가능할 것

이다.

그리고 위 법률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단되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일정기간(5년 내지 10년) 연장하여 제공한 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기업이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분사 등의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나.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 R&D자금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 제공

중견기업이 지급한 R&D자금을 대해 세액 공제만 하는 것만으로는 중견기업 육성측면에서 미흡한 감이 있음.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이 자체 기술개발 또는 신사업 진출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더라도, 자금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걸림돌이다.

신용보증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서류심사를 위해 지출하는 시간·인력 등의 기회비용만으로도 상당한 피로감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차라리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R&D자금을 중견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필요하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역할과 기능 강화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진출과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상의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대기업이 잘 된다고 시혜성으로 중소기업을 도우라는 말이 아니라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필요(시장의 공정한 심판자)하다.

과연 현재 공정위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얼마나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규제하였는지는 의문이다. 공정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현재와 같이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면, 장

기적으로 권한 이양도 고려해볼 사안이다.

3. 對 중소기업과의 관계 - 보호의 주체

오늘의 중견기업은 어제의 중소기업이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보호의 객체이듯이, 중소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보호의 주체이자, 규제의 객체라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TIP) 하도급법에 의하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 ① 원사업자 파산 또는 ② 3자 합의, ③ 원사업자 2회 이상 대금 미지급 - 원사업자(중견기업) 역시 과실 없이 발주자(대기업)로부터 어음 결제를 받는 등 현실적으로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직접 원사업자(대기업)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중견기업의 과실 없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방지효과)

사적 자치원칙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등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이론적 당부를 따질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제정 당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만으로 임차인에게 물권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오늘날 매우 효과적인 입법이었던다는 평가)

4. 결 론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주면, 대기업과 임금격차가 줄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바로서야 중산층이 복원돼 대기업 물건을 사는 시장도 형성될 것이다.

‘초원’과 ‘초식동물’이 사라진 사바나에서 ‘사자’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